

일자리 구조적 대응과 재정지원 중점



발표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일자리 구조적 대응과 재정지원

I 최근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

II 일자리분야 정책제언(안)

III 토론 및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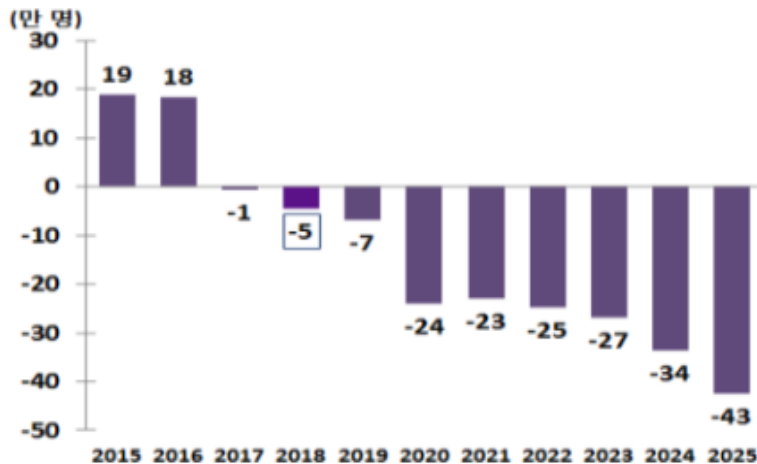


I 최근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제조업 고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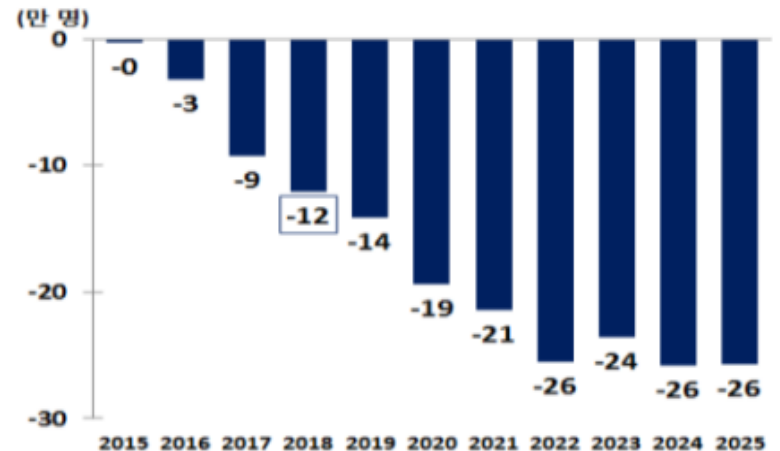
- '17년 기준, 15세 이상 전체인구는 전년대비 31만명 증가했으나 '33년을 정점으로 감소
-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었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향후 지속적 감소 전망

생산가능인구



- 15 ~ 64세(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어 전년대비 1만명 감소, 2020년에는 24만명, 2024년에는 34만명 급감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15~64세, 만명): ('17)2.1 ('18.1/4)△4.7 (4)△6.6 (5)△7.8 (6)△8.0

청년층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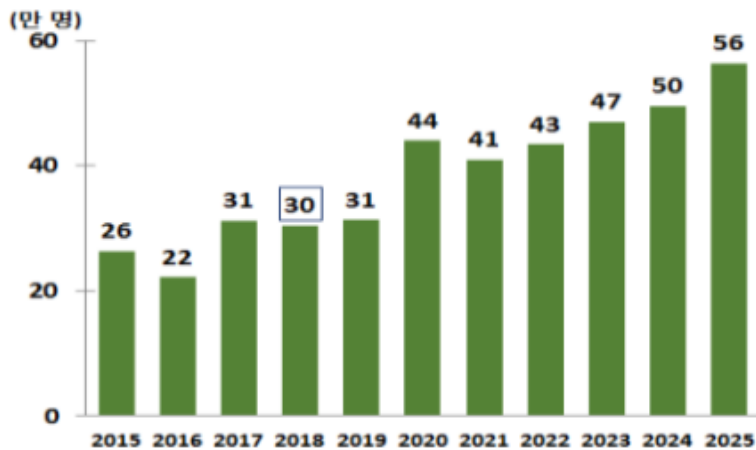


- 15 ~ 29세(청년층)는 2016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어 2017년에는 전년대비 9만명 감소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25 ~ 29세 인구는 2021년까지 약 39만명 증가 전망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제조업 고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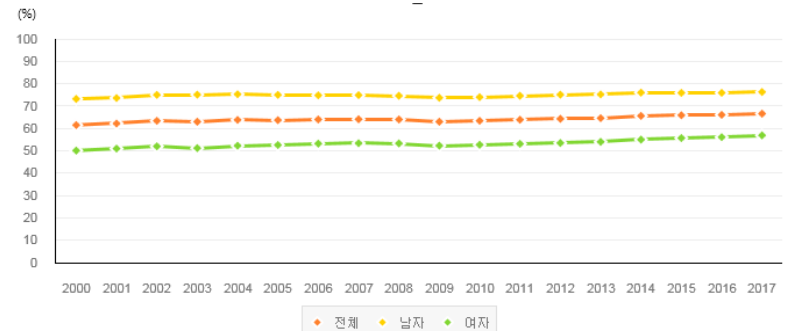
- 65세이상(고령인구)은 전년대비 31만명이 증가했으며, '20년에는 44만명 급증 전망
- 생산가능인구 및 제조업 고용 감소와 4차 산업혁명으로 중저숙련 일자리 중심 감소 예상

65세 이상 인구



- 65세이상(고령인구)은 전년대비 31만명이 증가했으며, 베이비붐 세대(1955년 ~ 1963년생)가 진입하는 2020년에는 44만명 급증하여 2025년에는 총 1,000만명을 초과할 전망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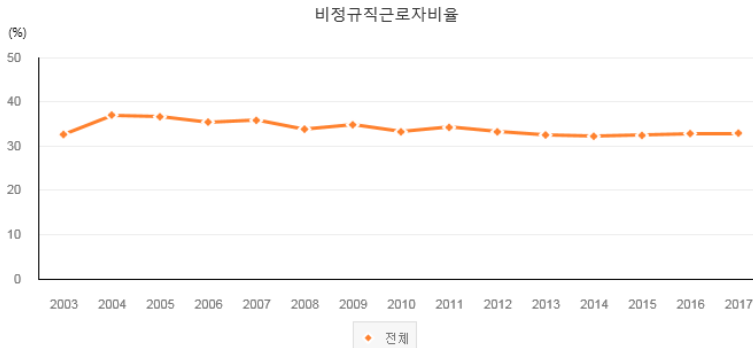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고용부진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고용률은 67%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취업자 증가는 지속적인 제약 발생
- 4차 산업혁명으로 중저숙련 일자리 중심 감소 예상되며, '20년까지 전세계의 일자리 514만개 감소(716만 감소, 202만 증가) 예측(WEF, 2016)

고용부진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양극화 심화

-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임시·일용직의 취업자 감소세 지속되면서 근로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양극화 심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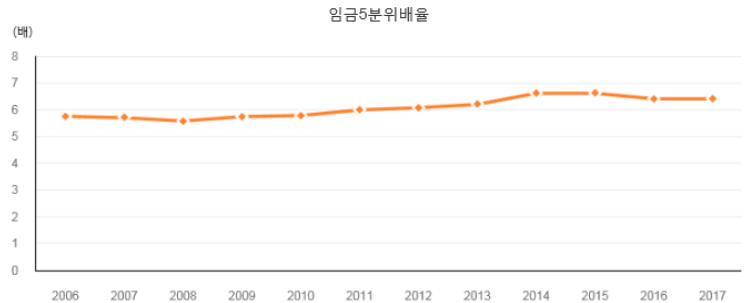
비정규직근로자비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고용보험 가입률(통계청, 2017.8)은 정규직 88.4%, 비정규직은 45.3% 수준임
- 상용직: ('17.4/4)38.2만명, ('18.1/4)40.9만명, (4)31.9만명, (5)32만명, (6)36.5만명
- OECD 주요국에 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낮으므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고용보험가입자에게 수혜 확대

임금5분위배율



[단위: 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5.75	5.72	5.57	5.74	5.78	6.00	6.07	6.21	6.62	6.63	6.40	6.41
남자	5.26	5.30	5.17	5.14	5.24	5.34	5.48	5.57	5.97	5.98	5.76	5.78
여자	4.96	5.07	4.93	5.39	5.28	5.70	5.68	5.92	6.15	6.20	6.14	6.23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주석: 1) 임금5분위배율 = 5분위(상위 20%) 평균 임금근로소득 ÷ 1분위(하위 20%) 평균 임금근로소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이직전 임금 대비 고용보험 지급액(%): 한국50, 독일60, 일본50~80, 프랑스57~75
- 최대지급기간(개월): 한국8, 독일12(58세이상 24), 프랑스12(50세이상 24), 일본11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 고용 악화

- 청년 실업률 최고치('17년 9.9%) 및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 출산·육아 등으로 여성경활참여가 제한적이며, 중장년은 준비없는 창업, 질 낮은 일자리

청년 고용악화

(단위 : %)

구 분	전 체	15-29세	15-19세	20-24세	25-29세
2012년	32	7.5	8.8	9.0	6.6
2013년	31	8.0	10.3	9.2	7.1
2014년	35	9.0	9.2	10.2	8.3
2015년	36	9.2	10.6	10.5	8.1
2016년	37	9.8	10.0	10.8	9.2
2017년	37	9.9	8.7	10.7	9.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청년층 실업률은 '12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17년 청년실업률은 9.5%를 기록
- 세부연령별로는 20~24세 연령대의 실업률이 10.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5~29세 실업률은 2015년~2016년 기간 간 1.1%p 증가하였으며, 대졸자 실업률 13.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최근 증가 추세

여성 및 중장년

- (여성) 출산·육아 등으로 여성경활참여가 제한적
 - * 여성경활률(16년, %)
(한국) 58.4% (남성 대비 Δ 20.5%p)
(OECD) 63.6% (Δ 5.2)
- (중장년) 재취업 준비도가 낮아서 준비없는 창업 및 질 낮은 일자리 창출
 - * 50세이상 자영업자증감(전년비, 만명):
(‘15) Δ 8.5만 (‘16)0.4만 (‘17)5.7만

II 정책방향(안)

혁신성장 지원 인력양성 투자로 고용확대

-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대응하여 획기적 수준의 재직자 교육훈련 및 적극적 재정 지원
- AI·빅데이터·블록체인·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분야 혁신인재 집중 양성 → 미래 핵심기술력 향상 및 고용확대

혁신성장 인력양성

구분	일자리 전망
Gartner('13)	· '25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1/3, '30년까지 90% 대체
WEF('15)	· 향후 5년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개 사라지고 신규 일자리 210만개 창출(△500만개)
日 경산성('16)	· 구조혁신 성공해도 '30년까지 161만개 감소 (현상 유지시 735만개 감소)
맥킨지('17)	· 정규직 인력 11.9억명이 자동화 영향을 받을 것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통신 분야 활용역량이 기본적 요소로 강조, 기계로 대체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직무역량의 중요성 증대
- 지능화 추세와 전문직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취업자의 증가량 및 증가율이 두드러짐
- 배달대행업, 대리운전업 등 디지털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시간/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증가

취약계층 훈련강화

- 미래를 대비한 인력수요공급 예측의 정교화 및 정보제공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훈련의 추진과 더불어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콘텐츠 공유 및 새로운 훈련방식 확산 등을 위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필요
- 대기업에 집중된 직무교육의 기회를 중소기업 노동자 및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소득격차 축소
- 기업규모별 훈련 참여율('16): 300인 이상 30.4%, 300인 미만 11.9%
- '16년 기준 비정규직 훈련 참여는 142천명 수준 (재직자 훈련인원 중 4.5%)

고용보험 확충 및 사각지대 완화 정책 병행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지원 강화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로 중층적 고용안정망 체계 구축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대상 확대

주요 선진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법적 지위	사회보험 등 법 적용 현황
 프랑스	법적 분류 없이 판례에 따라 일부 근로자성 인정	실업급여 적용 제외, 모성급여·직업훈련은 별도 기금 운용
 독일	유사근로자와 위장자영업자로 분리해 판단	유사근로자는 사회보험 적용 제외, 위장자영업자는 적용
 이탈리아	준종속근로자	사회보험 적용하되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기금 운용
 스페인	경제적 종속근로자	노동법 일부만 적용, 고용보험 임의가입
 영국	임금근로자(employee) 아닌 근로자(worker)	국민보험으로 단일화된 사회보험 적용
 미국	주(州)별로 특정 직종만 임금근로자로 분류	근로자성 인정되지 않으면 연방실업세법 적용 제외
 일본	자영업자	노동법 적용 제외, 노동조합법 일부 적용

그래픽: 김지영 디자인가자

MR 더니루데이

- 저소득 특고, 예술인 등 가입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 검토함. 특고 : 現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 활용 / 예술인 : 예술인지원금 전환(예술인복지법 개정안 계류 중, 문체부)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개업후 1→5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상황을 감안하여 취업성공 패키지와 연계한 ‘청년구직촉진수당’ 우선 시행
- 청년층 대상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 확대 개편(’19년)
- 시행(안)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대상 50만원X최대 6개월 지급
- ’20년에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중위소득 60%이하), 청년층(중위소득 150% 이하)을 포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조세를 통한 소득 지원

고용보험 확충 및 사각지대 완화 정책 병행

- 취업지원 중심으로 고용센터 혁신 및 고용복지 연계 중앙지방 협력 강화
- 일자리 미스매칭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생애 전반에 걸쳐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가기 어렵다는 인식

공공취업서비스 확충



- 모든 국민에게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구축 완료하고, 물리적 인프라 통합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입주기관 연계·협력 내실화 추진
- '14. 10개→'15. 30개→'16. 70개→'17. 98개

일자리플랫폼구축

- 현 고용정책은 대부분 구직자 또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 미흡
- 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직무역량을 개발하고,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기 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적기 제공 필요
-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구축
- 일자리 관련 주요핵심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및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계층별 일자리 확대 (청년)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中企 취업 인센티브 확대
- 향후 10년, 대졸자 이상 초과공급 75만명, 고졸자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

취창업 인센티브

청년 (중소기업 2,500만원)	신규	▶ 자산형성 800만원 + 주거비 70만 + 교통 120만 + 소득 45만원 = 연 최대 1,035만원
	구직자	▶ 청년구직수당 50만원 × 6개월 = 300만원
기업	중소기업	▶ 인건비: 10명 × 연900만원 × 3년 = 2.7억 세액공제: 10명 × 연1600만원 × 3년 = 4.8억
창업 (5년 이내 3명 신규채용)	창업자	▶ 인건비: 청년3명 × 연900만원 × 3년 = 8,100만원 세부담: 0원

취업 청년 소득, 주거, 자산형성 지원(18~21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혜대상은 크게 청년(신규 취업자, 구직자), 기업(중소·중견기업), 창업자 구분
- 청년 신규취업자의 경우 연간 최대 1,035만원, 구직자의 경우 300만원의 수혜, 기업은 청년 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7.5억의 고용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청년 직업능력개발

청년 대상 신기술 분야 고숙련 직업훈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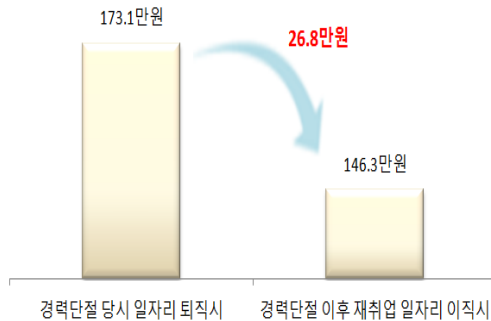
- 청년 대상 직업훈련은 주로 입직 단계 이전 실시되는 실업자훈련의 일환으로 다기능기술자 양성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등 확대
- 직업훈련에서 향후 수요가 확대될 신기술 분야에 대한 고숙련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 폴리텍의 하이테크 과정 확대, 대학 등 민간 선도훈련기관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확대, 특성화고의 유망분야 훈련과정 확대,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훈련 추진 필요

계층별 일자리 확대 (여성)

-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및 복직 활성화

취창업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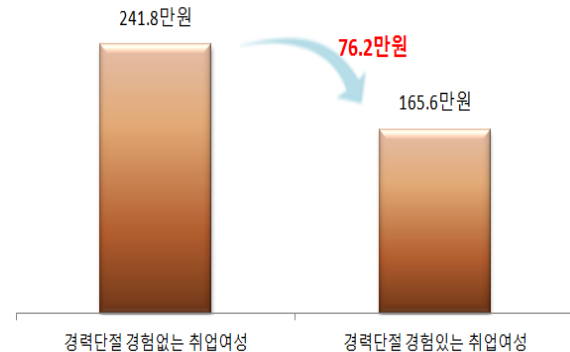
경력단절 전후 소득차이



- 여성들의 인적자원수준이 높아진 것에 비해, 경력 단절로 인해 인력들을 노동시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로 저출산·고령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은 더욱 중요
-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함

여성 일자리

경력단절 경험여부에 따른 소득차이



- '16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90만 6천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20.6%에 해당하며, 결혼(34.6%)과 임신·출산(26.3%), 가족돌봄(4.8%)을 이유로 경력을 단절한 여성이 65.7%를 차지
-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8.4년,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은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월임금이 76.3만원이 적음

계층별 일자리 확대 (중장년, 사회서비스)

- 중장년 적합업종 개발 및 中企 취업지원
- 사회복지·보육·요양·장애인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중장년 일자리

- 고령화로 인하여 평생 동안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 필요, 5060 신중년 세대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72세까지는 일자리를 희망하고, 이들의 직업훈련 욕구도 동반 증가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성장동력 감소에 관한 대응 필요
-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중장년 적합업종으로 채용시 사업주에게 일정액 지원
-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은퇴자 기술·기능 전수를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도입 등으로 민간시장에서의 고령자 고용 촉진하는 등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유형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
- 일자리 확대 및 종류 다양화, 일자리 나누기(근무시간 단축 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개선 추진 국·민체감형 및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 복지시설 종사자 연가 보장,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합리적 교대근무 체계 마련(예. 2교대 → 3교대)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
-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시간제 자활근로 도입, 예비 자활기업('20년 300개) 등 자활일 자리를 1,500개 추가('17년 4만5000→'18년 46만5000개)

END OF DOCUMENT